2020. 1. 23
KIEP 중동연구회

솔레이마니 사망 이후 중동 정세 변화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중동센터장
jhjang@asaninst.org

1. 솔레이마니 이란 사령관 사망 이후 미국-이란 위기구도

2. 트럼프 대통령의 솔레이마니 제거작전 배경과 평가

3. 향후 이란의 대응 전망

4. 향후 중동 정세와 유럽의 대응 전망

5. 우리에게 주는 함의

I. 솔레이마니 이란 사령관 사망 이후 미국-이란 위기구도

1. **2020년 1월 미국의 솔레이마니 제거 작전 직후 이란, 확전 의사 없는 정교한 대미 미사일 공격으로 출구전략 성공함.**

- - 이란 군부의 최고 실세 솔레이마니 쿠드스군 사령관이 이라크 바그바드 국제공항에서 미군의 드론 공격으로 사망함.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막기 위한 방어, 이란 최고 지도자는 가혹한 보복 선언함.
- - 트럼프 대통령, 이란발 보복 이후 전쟁 대신 살인적 제재 부과 선언해 미국-이란 간 전면전의 일촉즉발 위기는 봉합됨.
- - 미국의 솔레이마니 제거 이후 이란 내 반미 여론 확산됐으나 뒤이은 이란 혁명수비대의 우크라이나 여객기 오인 격추로 이란 내 반체제 시위 시작됨. 이후 혁명수비대가 진압에 나서며 진정 국면에 들어감.
- -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예멘, 가자지구 내 친이란 민병대 프록시의 저강도 소규모 다발성 도발은 이어질 것임.

I. 솔레이마니 이란 사령관 사망 이후 미국-이란 위기구도

2. 미국-이란의 갈등은 확전 우려에서 핵문제로 전환됨.

- - 2020년 1월 5일 이란, 핵합의 이행 축소 5단계 조처이자 마지막 단계 돌입, 원심분리기 수량과 가동 시한에 제한을 두지 않고 5% 농축 활동 선언함.
- - 2018년 5월 트럼프 미 행정부, 일방적으로 이란 핵협정 탈퇴하고 고강도 제재 부활하자, 1년 후 이란, 60일마다 미국과 유럽의 핵합의 준수 여부를 점검, 상응한 이행 축소 조치 발표함.
- - 이란의 이행 축소 마지막 단계 돌입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으나 솔레이마니의 폭사 직후 더 큰 파장을 불러옴.

II. 트럼프 대통령의 솔레이마니 제거작전 배경과 평가

1. 트럼프 대통령, 군과 정보당국의 신중 건의에도 불구 드론 공습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짐.

- - 탄핵 정국 돌파, 대선 전 강한 이미지 부각 등 국내 정치적 계산으로 보임.
- - 10여년 간 제거작전 준비한 정보국 내부 분파의 매몰비용 우려 요소도 제기됨.

2. 제거작전의 정당성, 미국 국익, 최근 정세 반영한 전략적 판단, 동맹국의 불안감 가중 측면에서 효과적이지 않음.

- - 미국이 테러조직으로 규정한 혁명수비대는 알카에다나 ISIS와는 구별되는 주권국가의 핵심 정예부대임. 최근 미국-이란 격돌의 근원은 미국의 다자합의 파기로 시작됨.
- - 이란은 개인 한명이 좌지우지하는 나라가 아니므로 현 긴장 상황에 맞춰 지배연합 내에서 더욱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인물들이 솔레이아니를 대체할 것임.
- - 역내 미군 기지와 관련시설, 미국인에 대한 위험 증가됨.

II. 트럼프 대통령의 솔레이마니 제거작전 배경과 평가

2. 제거작전의 정당성, 미국 국익, 최근 정세 반영한 전략적 판단 정도, 동맹국의 불안감 가중 측면에서 효과적이지 않음.

- - 솔레이마니와 혁명수비대를 향한 국내외 비난이 절정에 달하고 있었음. 2019년 말 이라크와 이란 시위대 유혈진압 배후로 솔레이마니가 지목됐고 레바논의 시위대 역시 솔레이마니의 명령체계에 놓인 헤즈볼라를 반대했으나 정세 반전됨.
- - 이란 온건파와 시민사회, 이라크 시민사회, 수니파와 쿠르드 입지 축소될 것임.
- - 미 동맹·우방국, 자국 우선주의와 고립주의 내세운 미국의 중동 탈출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며 자생력 강화와 다변화 모색해왔음. 하지만 작년 말 미국의 동맹 배신과 일탈 방관에 이어 연초 역내 긴장도 최고조 상승을 두고 불안감과 피로감 쌓임.

3.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적 행동 견제하기 위한 의회 움직임이 이어지나 효과는 높지 않을 것임.

- - 민주당, 전쟁권한법(War Power Act: 60일간 대통령의 전쟁수행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결의안 작성함.

III. 향후 이란의 대응 전망

1. 이란은 비대칭적, 비전통적 방법으로 저강도 소규모 보복에 나설 것임.

- - 역량이 약해서 잃을 것도 적은 쪽의 틈새 전략으로 사이버 공격, 드론 테러가 대표적임. 이란이 직접 대미 사이버 공격을 벌이는 정황도 포착됨.
- - 군 지도부 공백에서 벗어난 후 프록시 이용해 미 동맹·우방국의 유전시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대한 드론 공습할 수 있음.
- - 헤즈볼라를 비롯한 역내 이란 프록시 조직들은 솔레이마니 사망 이후 지원 축소를 우려해 충성 경쟁을 벌이며 "보복전"을 활발히 벌일 것임.

2. 이란, 2월 총선에서 보수 강경파의 승리가 확실하므로 핵합의에 대한 강경 입장 고수하며 협상력을 높이려 할 것임.

- - 2년 전부터 반체제 시위가 확산됐으나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이해가 상충되기 때문에 두 세력이 연합해 더 큰 시위로 발전할 가능성은 낮음. 중산층은 정치적 자유와 개방, 저소득층은 민생고 해결을 요구함.
- -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연합하더라도 현 성직자 체제의 몰락 이후 두 세력의 지지를 동시에 받는 상징적 인물의 뚜렷한 대안 시나리오가 없음.

III. 향후 이란의 대응 전망

2. 이란, 2월 총선에서 보수 강경파의 승리가 확실하므로 핵합의에 대한 강경 입장 고수하며 협상력을 높이려 할 것임.

- - 2월 총선을 앞두고 보수 성향의 헌법수호위원회가 개혁 성향의 총선 예비 후보자를 대거 탈락시킴에 따라 온건 개혁파 지지층은 선거 보이콧을 선언함. 로하니 대통령, 개혁 성향 후보자의 탈락에 대해 공개적으로 항의함.
- - 미국의 이란 핵합의 파기 이후 시작된 온건 개혁파의 입지 축소는 이번 2월 총선 이후 이란 국내 정치권력 구도 내에서 더욱 극명해질 것임.

3. 2월 총선에서 보수 강경파가 압도적으로 이길 경우 미국 대선을 앞두고 빠른 협상력 제고를 위해 NPT 탈퇴라는 초강수를 둘 수도 있음.

- - 미국과의 대치국면에서 핵무기 개발 단계 이전까지 기술적 역량을 확대해 중동 내 핵확산 움직임을 부추기면서 대미 제재 철회를 압박할 수 있음.
- - 지금까지 이란은 NPT 체제 안에 있고 IAEA의 사찰을 받고 있으나 미국의 "살인적 제재 압박"이 보수 지지층의 민생고 시위로 재점화될 경우, 미국의 제재 철회를 압박하기 위해 미 대선 이전 충격요법을 쓸 수 있음.

IV. 향후 중동 정세와 유럽의 대응 전망

1. 미국의 솔레이마니 제거작전 직후 여러 중동 국가들, 자제 촉구하며 조기 종결 희망함.

- - 미 동맹국 사우디, UAE 등 걸프 지역 국가들은 긴장 완화를 촉구했고 최근 이란과 밀착해온 터키 역시 뚜렷한 입장 표명하지 않음.
- - 유럽은 자제 촉구,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 비난한 반면 이스라엘은 미국 지지 표명함.
- - 제거작전 이후 알샤바브의 미군기지 공격에 극단주의 테러조직의 불가측성 부상이라는 후폭풍 우려가 컸음.

2. 미국, 대이란 제재 강화와 트럼프식 새로운 협상 추진할 것이나 이란 핵합의 위반 분쟁조정 절차에 착수한 독·불·영, 트럼프식 최대 압박에는 반대할 것임.

- - 영·불·독 외무장관, 이란 핵합의 위반에 분쟁조정 위원회 조직해 핵합의 유효, 이란의 준수 촉구 선언함.
- - 미국, 유럽 3국의 분쟁조정 절차 착수 이전, 유럽산 자동차에 25% 관세 부과를 경고했다고 알려짐. 미국과 유럽은 이란 핵합의, 미군의 시리아 철수, NATO 방위금 분담 문제를 두고 갈등해옴.
- - 존슨 영국 총리는 트럼프 딜 지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유럽 국가의 스냅백 제재, 즉 이란 핵합의 이전의 유엔 제재 부활 촉구함.

3. 미국은 이란 핵문제에 집중할 것이나 자국 우선주의, 신고립주의에 기반한 중동 병력 축소라는 큰 틀을 바꾸지 않을 것임.

V. 우리에게 주는 함의

1. 방위비 분담 협상과 맞물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미국의 한국 파병 요구가 거세짐.

- - 국방부는 현지 군 연락관 파견과 향후 아덴만에서 활동 중인 청해부대의 활동 반경을 호르무즈 해협으로 확대하는 독자 파병안 결정함.
- - 작년 이미 한-미간에는 1-2월 중 연락장교 파견, 청해부대의 작전반경 확대 등이 논의된 것으로 추정됨.
- - 향후 청해부대 반경 확대 시,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함. 청해부대 파병은 국회 동의를 정기적으로 얻어 왔으나 그 범위는 아덴만 지역 해적퇴치 및 우리 선반 안전 확보임.
- - 미국의 솔레이마니 제거작전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도 유사 시 동맹·우방국에 미국 주도의 연합전선 구성과 다국적군 참여를 요청할 가능성 존재함.

2. 중동 불안정의 장기화에 대비해 우리 에너지 수입원의 다변화, 셰일 에너지 수입 확대 방안을 고려해야 함.

3. '새로운 길'을 선택한 북한 정권은 솔레이마니 제거 작전을 비난하며 정권 생존 위한 '자위적 핵무력'을 주장할 수 있음.

- - 미국, 이란 문제 집중위해 북한 문제는 '관리' 수준에서 접근할 가능성 높음.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중동센터장

jhjang@asaninst.org